

ISSUE & FOCUS

Newsletter 2017-7

한미동맹으로 본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평가

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후 귀국하였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첫 외국방문이었고, 사드(THAAD)문제로 다소간의 서먹함이 존재하고 있는 한미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염려와 기대가 공존했던 방문이었다.

성과보다 많은 숙제

문재인 대통령은 방문 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진정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 정도 만찬을 하면서 인간적인 대화를 나눴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질적인 신뢰의 형성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평가해야 하는 것이어서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다. 앞으로 필요할 때 수시로 전화를 걸어 대화할 수 있다면, 이번 방문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고한 지원을 획득하고, 사드 문제에 관한 서로간의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교환하며, 미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적 노력을 결집하겠다는 다짐을 받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만족스럽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미정상이나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거론된 사항 이외에 안보공약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항이 없고, 사드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으며,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도 현재와 크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북핵 문제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이익이라고 본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그렇지 않았다.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정상회담으로 인하여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재협상이나 방위비분담의 증대 등 부담을 안게 된 점은 분명하다. 트럼프가 선거를 통하여 가장 강조한 점이 무역역조를 시정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었고, 세계경찰로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은 예상되었고,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적정선에서 타결해 나가야 한다.

더욱 큰 숙제는 남북문제에 대한 주도권에 관한 사항이다. 다수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하여 미국이 대화를 중심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방향에 대해 양해한 것을 성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대화를 통한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가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남북관계 주도권을 상실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대화는 북한이 호응해야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고, 따라서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합의의 내용

그렇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합의한 것은 무엇인가? 양 정상이 언론을 통하여 발표하거나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합의의 해석이거나 보완이기 때문에 공동성명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지금도 철통과 같이 유지되고 있고...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확고히 하였다.”고 합의하였다. 이것은 이전에도 합의되어온 것을 반복한 것이지만, 사드를 둘러싼 서먹함이 존재하고, 북한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를 의심하는 미국의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지속성을 확인한 것은 이번 방미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라고 봐야할 것이다.

둘째, 양국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 내용은 이전 박근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가 합의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새 대통령들이 재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조속히’와 대한민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한국의 자주성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해질 경우 미군이 한국에 대한 책임을 줄이는 구실로 활용할 소지도 있다. 트럼프와 같이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 경우 한국에 대한 공약의 이행을 재고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할 경우 이 합의는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양국 정상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는 부시 행정부부터 지속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원칙으로서 문 대통령이 여기에 합의하였다는 것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북한과의 대화 추진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CVID 조건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무척 낮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이 대화를 추진할 경우 위 합의가 구속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양국 정상은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고 합의하였다. 이것은 현 정부가 방미 성과로 강조하고 있듯이 문 대통령의 대북 접근방향을 미국이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직후 언론발표에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선언하였고, 중국의 단둥은행을 제재하거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승인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미국이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미국의 정책 자체가 대화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합의로 미국의 일방적 대북제재에 간섭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 양국 정상은 “역내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역지력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기존의 양자 및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월 G20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함께 3국 협력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

기로 했다.”고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언론에서는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필자의 시각에서는 이번 방미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한국, 미국, 일본 간의 안보협력을 추진할 것임을 명시한 것으로 이해되고, 중국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북핵 대응을 위하여 보수층에서는 이와 같은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합의한 것은 의외일 수 있다. 어쨌든 이로써 한국과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로써 한국, 미국, 일본의 결속도가 커질 경우 중국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다.

여섯째, 양국 정상은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또한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하였다.”고 합의하였다. 이것은 미측이 요구한 것을 한국이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도 많았는데, 역설적으로 잘 체결되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는 합의이다. 한미 간의 관계가 건설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호혜성이 높아져야 하는 만큼 합의한 대로 양측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서로가 손해 보지 않으면서 공동의 이익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이외에도 양국 정상은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여타 경제적 이슈에서의 협력을 증진 및 확대하고... 사이버안보, 정보통신기술과 민간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고, “글로벌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동맹의 미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연내에 방한하기로 하였다.

과제와 기대

정상 간의 회담에서는 원칙적인 사항 중심으로 논의되기 때문에 회담 자체로 그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회담 이후 그것들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방향과 내용에 합의해도 구현되지 않으면 미사여구로 끝날 수밖에 없고, 다소 미흡한 합의라도 실무자들이 잘 구현하면 실질적인 성과로 남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방미의 성과가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각 부처에서도 성실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번 방미에서는 문대통령이 사드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을 표명할 기회는 있었으나 공동성명에 포함되었거나 양국 정상의 공동언론 발표 등에서 언급되지는 않았다. 사드라는 무기가 정상 간에 거론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현재 한국, 미국, 중국 간의 관계를 흔들 수 있는 뇌관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벼운 사안으로 볼 수는 없다. 사드는 결코 어려운 문제라서 서로가 회피하였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렇다면, 한미 양 정상이나 정부는 아직 서로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 이견도 스스럼없이 토론하는 것이 건강한 동맹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은 첫 회담이고 서로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연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다고 하니 그리 많은 시간이 남은 것도 아니다. 그 외에도 G20 정상회담 등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기회는 없지 않을 것이다. 다음 기회에 만날 때는 형식과 수사에 얽매이지 말고, 두 분이 양국의 공동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혈맹인 한미동맹의 건강성을 다시 과시해주기를 기대한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